

# 野 “주일대사관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요구”

원전 오염수 시찰단 귀국...성일중 “분석자료 이번주 국민 보고”

민주 “日, 시찰단 복귀 하자마자 청구서 내밀어...정부 큰그림 인가”

국민의힘은 29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귀국을 계기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는 야당 공세에 대해 ‘고담 정치’라고 일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가능성과 연계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중 의원은 29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과 관련해 “국민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금주에 (시찰단) 보고가 있지 않겠냐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주 여러 가지 분석이 끝나고 나면 분석한 것에 대해,

또 갔다 온 결과에 대해 국민 보고도 있을 거고 당에도 와서 보고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찰단 명단에 대해서는 “당에서는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마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2021년 8월 문재인 정부 시절 약 30여명을 대한민국 최고 과학자들로 뽑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TF를 가동했는데, 이번에 간분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당시 TF에 참여한) 사람들이 거의 다 갔다”고 강조했다.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도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성 의원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하지 않겠다는 입

장은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우리 정부도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해 방류하는 것을 찬성한 적이 없는데, 이게 국제법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기준치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오염수 관련 공세에 대해 “고담 정치로 과학을 이기겠다는 나라가 문명 국가에 몇 개나 있느냐”며 “품격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TF 위원인 홍석준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다핵종(多核種) 제거설비(ALPS)로 처리해 나오는 삼중수소는 현재 예측된 양이 860TBq(테라베크렐-베크렐은 방사능 단위)이고 이를 30년에 걸쳐 나눠 배출한다”며 “그런데 지금 1년에 중국에서 나오는 삼중수소량이 1,050TBq”이라고 밝혔다.

그는 “ALPS로 나오는 삼중수소는 4~5년 이후 대한민국 해역에 도달하는데 지금 중국 원전에서 1

년에 나오는 양이 후쿠시마보다 거의 100배 가까이 많다”며 “민약 삼중수소 위험이 심각하다면 벌써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주한 일본대사관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에 관해 ‘한국에도 다양한 기회에 조기 규제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일본은 벌써 우리 정부의 ‘들러리 시찰단’을 지렛대 삼아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 시찰단이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재개를 위한 요식 절차라는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며 “이 정도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그려온 큰 그림이냐”며 “일본과 주머니 받거니 하며 ‘국민 눈속임’으로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의 명분을 만들고

자 작전이라도 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우리 국민의 불안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성국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를 보여주는 대가로 일본이 져야 할 책임을 우리와 나눠질 수 있게 됐고, 면죄부도 얻었다”며 “역시나 일본은 시찰단이 복귀하자마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청구서를 내밀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치가 과학을 이기려 해서 안 된다’고 했다”며 “시찰단이 일본 정부가 보여주는 것만 보고, 다핵종저거설비(ALPS) 처리수 시료 채취도 못 한 건 과학적 판단이다, 아니면 정치적 결정이냐”고 반문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봉축법요식서 만난 여야 국회의원 김기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합창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돈봉투 수사하려면尹도 수사해야”

송영길 SNS “강남구 공천 대가 한일 외교 찬양...수혜자는 대통령”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돈 봉투 논란 최종 수혜자로 송영길을 수사하겠다”면 당연히 ‘태영호 녹취’의 최종 수혜자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로 지난달 민주당을 탈당한 송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북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녹취록’이 촉발한 돈봉투 의혹 수혜자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는 송 전 대표가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촉발했던 국민의힘 태영호 전 최고위원 녹취록을 거론하며 정치적 반격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MBC는 지난 1일 태 전 최고위원이 3월 9일 의원회관에서 보좌진을 대상으로 발언한 녹취를 입수했다면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관계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해 달라는 취지 요청을 했다”는 발언을 전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태영호 녹취록”을 보면 강남구 공천 대가로 대통령 한일 외교에 대한 옹호·찬양의 최종 수혜자는 윤 대통령”이라면서 “사건의 최종 수혜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당내 선거 개입, 공천 개입은 정당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미 시민단체가 태 전 최고위원 등을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공수처는 검찰이 ‘이정근 녹취’에 기초한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것처럼 태 전 최고위원과 이 정무수석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등 적극적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 대통령실 ‘불법집회 엄정 대응’ 재확인

924명 검찰 송치·103명 구속...민노총 31일 도심 집회 예고

대통령실이 시민 불만을 야기하는 불법집회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민주노총이 오는 31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원칙에 따른 법 집행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28일 “현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규제나 제한도 없을 것”이라

며 “그런데도 민노총이 또다시 노숙 투쟁을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법치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노총의 불법집회와 시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 것은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것이 노동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200일 동안

계속되는 ‘건설 현장 주요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그 연장선의 활동이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까지 938건, 5570명을 단속해 이 중 924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103명을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603건, 4024명에 대해서는 내사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 1일 건설노조 간부 양희동 씨가 분신 사망한 뒤에도 80건, 636명을 추가 단속하고 이 중 183명을 송치, 18명을 구속하는 등 흔들림 없이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 집행 공무원들에게 힘을 실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김남국, 이해충돌 있다면 징계 무거울 것”

위철환 민주 윤리심판원장 “국민 뜻 받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위철환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은 29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논의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좀 문제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출연, ‘경우에 따라 김 의원 제명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회의원들도 국민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위 윤리심판원장은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 투자가 했거나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면 그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돼야 한다”며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 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사법기관의 판단을 한 번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자유투표로 하기로 들었다”면서도 “객관적인 돈봉투 사건의 실체로 확인된 것으로 실랑이 된다면, 엄정하게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율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짝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